

과학기술 우대하는 사회체제 시급



崔秉琯
(경원대학교 교수)

새 시대 21세기의 핵심 화두중의 하나가 '지식'이다. 핵심 화두라는 표현에 어긋나지 않게 '지식기반 사회', '지식기반 경제', '지식산업', '지식사회', '신지식인' 등 '지식'을 표방하는 다양한 용어가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 용어들은 하나같이 새 시대 21세기에는 모든 인간활동과 경제·사회발전이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식'을 앞세우는 까닭은 과거에는 발전의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지식'이 앞으로는 압도적이고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지식의 시대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꼽는 지식

의 바탕은 대체로 IT, BT, NT, ET, MT 등 T자(字)로 끝나는 과학기술이다. 지식사회의 도래를 천명한 선두주자중의 한 사람인 서로우(Lester C. Thurow)같은 학자는 구체적으로 마이크로공학·전자통신·신소재·컴퓨터·로봇·생명공학을 새 시대를 이끌어갈 과학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말하자면 이들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지식을 축적·활용할 수 있는 개인·기업·국가만이 21세기의 무한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이공계 기피현상 우려

우리나라는 땅은 좁고 부존자원은 빈약한데 인구는 대단히 많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화에 본격 들어선 지난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발전과 고급 두뇌 양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을 직접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두개나 있고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거의 대부분의 부처도 과학기술 진흥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1960년대 말엽부터는 수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초·응용 기술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의

연구지원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대단히 우려할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 이공계열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른바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인 서울대 이공계열 합격자가 무더기로 등록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수년 전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변이 나타난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21세기 지식사회의 바탕이 과학기술이고, 이를 축적·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래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인력이 몰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IMF 지원체제 하의 고실업사태를 경험하면서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친 탓일까. 아니면 이공계열의 입시준비가 인문·사회계열보다는 다소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인가. 물론, 이런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런 이유만으로 작금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법하다. 이를테면 외형상으로는 과학기술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21세기에는 모든 인간활동과 경제·사회 발전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지식의 바탕은 대체로 IT, BT, NT, ET, MT 등 T자로 끝나는 과학기술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공계열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져 우려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는데는 과학기술과 지식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우대하는 사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는 이를 경시하거나 천대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해볼 일이다. 사실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 정부 또는 사회 전반의 언행 불일치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도처에 널려 있다.

예컨대 정부가 기술입국을 천명하고 KIST를 비롯한 각종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던 시절에 이들 기관은 고급두뇌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당시 이들 기관은 고급두뇌의 유치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파격적인 대우를 불사했다. 그 결과 한때는 이들 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과학기술 발전의 선두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이들 기관은 과거의 활력을 잃고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구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대폭 늘어난 반면에 노력에 대한 대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이 그 원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기관에게서 고도의 정책 수립과 첨단 기술개발을 마냥 기대하기만은 어렵게 됐다. 정부가 마음먹고 설립한 국책연구기관이 이렇다면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은 어떠하겠는가. 이것은 결국 정부가 걸으로 내세운 말과 구호가 실제의 행동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과학기술 경시풍조는 정부의

직제나 인사관행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행정직은 보직의 범위가 대단히 넓을 뿐만 아니라 승진의 기회도 많다. 그러나 전문기술직은 보직의 범위와 승진의 기회가 크게 제약은 받는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해져서 최고 관리자인 장·차관은 기술직에게는 거의 오를 수 없는 직위로 알려져 있다. 이들 직위는 거의가 경제·법률관료나 정치인의 몫이다. 현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과학기술 우위론이나 지식사회의 출현을 믿겠는가.

과학기술 우대 풍토 시급

이 밖에도 객관성·합리성·능력 등에 앞서서 학연·지연 등 각종 인연이 판치는 현실, 잘못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풍토, 탄탄한 기초다지기 보다는 검증안된 획기적 아이디어를 좇는 행태, 진정한 자문구하기 보다는 행정절차로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 교통비에 불과한 자문비 액수 등 우리 사회의 실제모습은 과학기술 또는 지식의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젊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등지고 고시준비에 열중하며 실리적 학문에 몰리는 것은 전혀 이변이 아닌 현실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는 데 백마디 구호는 필요없다. 그보다는 과학기술과 지식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우대하는 사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첫째, 자신의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회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책임있는 행동의 기반은 결국 객관성과 합리성, 즉 과학기술과 지식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지식인이 해당분야의 최고 정책결정자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사회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정치·행정 우위현상을 그대로 둔 채 과학기술이나 지식의 발전을 운위하는 것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학기술과 지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충분한 대가를 받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대가의 크기가 곧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구가 중시되는 풍토를 다져야 한다. 기초없는 발전은 중국에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⑤7